월요광장

세월호 유가족 상처 어루만지는 공동체의 역할

강 용 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95명이 죽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9명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TV 생중계로 바라봐야 했던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슬픔과 죄책감으로 수없이 반성을 했습니다.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불행에 대한 연대'인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유가족들이 1주기 추모식을 치르는 대신 상복을 입고,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광화문에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세월호를 인양해달라고, 돈으로 능욕하지 말라고 호소하다 공권력에 막히고 끌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공감 능력(empathic capacity)의 결여로 오히려 상처를 키우기만 했습니다.

진상 규명 없이는 제대로 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진실을 알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 중 트라우마는 외적인 원인, 즉 가해자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 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치유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국가가 진상 규명을 외면한다면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키우는 가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이런 정의의 실현 없는 치유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 공동체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할 때, 그 자체가 치유적인 역할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정의를 성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규명되어야 그 바탕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로, 피해자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최대한 상처를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을 가로막으면서 배상 운운하며 사망자 1명 당 얼마,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자식 잃은 부모들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배(보)상금 지급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의 품격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소중합니다. 보상 문제에서 공동체가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할 방향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중의 가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그 고통스런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을 갖자는 뜻입니다. "잊지 말자"는 말은, 잊으라고 강요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피해자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현재화해서 함께 추모하자는 게 바로 기억인 것입니다. 망각에 맞서 올바로 기억할 때만 우리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개인적 치유와 사회적 치유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과 관련된 트라우마 증상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개인의 일상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정의를 회복하여 사회 정치적 재활을 돕는 '인권적 접근 방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그 책임을 져야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치유의 선결 조건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의 노력과 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사회적 치유와 공동체의 정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뜻이지요.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야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세월호 유족들의 말과 고통에 귀 기울이는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된 지금,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슬퍼할 여유조차 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애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비하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 것입니다. 304명의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으려면 진실을 밝혀야 하고, 공동체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법조칼럼

"내 세금 돌려줘"

김 동 관
광주지법 판사

며칠 전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과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다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말고도 위와 같은 소송, 즉 조세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조세, 왠지 생소하다고 느껴지시죠? 지금부터 조세소송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란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납세고지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주로 문제 되는 세금은 국세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고,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 재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위 세금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맞닥뜨리게 되는 세금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조세소송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고 두 번째로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 과세관청에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과세관청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을 어디에 제기해야 할까요? 과세관청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외 지역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국세청장·감사원)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제도를 통하여 먼저 구제를 신청하고 여기서 인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심 절차라고 합니다. 다만, 지방세(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시한을 놓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꼭 시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조세소송의 건수는 연간 약 1500건 정도 되고, 소송금액은 1조 원이 넘으며,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10% 이상이 됩니다.

위 승소율은 전심 절차에서 인용된 것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다면 조세소송도 한번 제기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오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해결되면 더욱 좋겠죠?

기 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웅 돼야

한 국 환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강사

"시대가 영웅을 낳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의 물음에 대부분은 "시대는 영웅을 낳고, 영웅 또한 시대를 만든다"고 답변할 것이다. 이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떤 변수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두 분을 꼽는다면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큰 업적을 가진 위인도 많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도 문인으로선 세종, 무인으로선 충무공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분을 우리 역사상 출중한 인물로 내세우는 데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종은 부친 태종이 왕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한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다진 좋은 환경'에다 부친의 충신들이 그를 떠받들어 우군(友軍)이 많았다. 반면, 충무공은 '멸문지가'의 출신으로 인맥을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홀로 노력하여 성장한 위인이었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워 빛나는 업적을 인정받았다. 더군다나 심한 당파 정쟁(政爭)의 격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라에 충성했으니 더욱 '군계일학'의 인물이었다.

작년 여름, 전국 영화관을 뜨겁게 달군 영화 '명량'의 열기가 더위를 식혔다. 그래서 그 열기의 이유를 찾아본다. 충무공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충과 효의 훌륭함, 그리고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극적 발언과 부정적인 여러 행태 등이 많은 관객을 끌어들였을 것이지만, 더 큰 이유는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 '세월호 참상' 등으로 정경유착,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위 '갑들의 횡포'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던 바, 세상을 바르게 세울 '위대한 리더 출현의 갈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난국(難局)을 타개할 인물이 필요하다. '명량'의 열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 정파와 지역 그리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역사도 많지만, 난세의 영웅 충무공은 나라를 구하는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침으로써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후세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충무공의 등장은 몇 번 있었다. 조선후기 개혁의 정조 때도 화려하게 등장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역사학자, 소설가에 의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물로 등장되었으며, 박정희 정부시절에도 사회전면에 내세워졌다. 또한 현 시국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충무공 같은 위인이 절실히 필요하던 때에 '명량'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 열기에 빠졌다. 그리하여 위대한 영웅의 활약상을 통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억눌린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충무공의 명언을 요약해 본다. "집안이 나쁘다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으로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탓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 탓하지 마라. 나는 과거에 거듭 낙방하고 서른 둘 늦은 나이에야 무과시험에 겨우 급제하였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왜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 일곱에야 겨우 지휘관이 될 수 있었다. 조직이 없다 실망치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일구어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 싸워 스물세 번 이겼다. 자본이 없다 실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선을 격침시켰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마라. 나는 스무 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고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이처럼 충무공은 불굴의 의지로 성장하였으며 끝까지 싸우다 순국(殉國)한 위인이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 힘겨운 청장년들(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에게는 절망의 시대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리더가 더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올 2월부터 '징비록'이 TV에 방영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임진왜란 때의 국제상황과 닮았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배우며 깨닫고 교훈 삼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리더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사리(私利)에 휘둘리면 자신도, 조직도, 나라도 크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한다. 그래서 국민, 공직자, 조직 모두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에 놓아야 한다.

오는 28일이 충무공 탄신일이다. 그 분의 정신과 활약에 감탄, 환호에만 그치지 말고 올곧은 정신(upright spirit)을 이어받아 우리의 머리, 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만들어 가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양 성 관
동강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서른다섯 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국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이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장애인을 위한 기념행사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행사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정부 예산비율이 0.1%로 최하위다. 장애인에 대한 연금 수급비율 역시 1.5%로 멕시코(0.7%) 다음으로 낮다. 2014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6%, 고용률은 37.0%, 실업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3.0%, 60.8%,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의 예산지원과 고용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와 콜택시 보급률이 아직도 낮아 장애인들이 이동 하기위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요즘 늦은 밤 시간대에 희미하게 깜박거리는 불빛과 함께 차도와 인도를 오가는 전동휠체어를 보면 아찔한 경우가 많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도로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너무나 많은 장애 투성이인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의 자유권을 확보해주는 예산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권 확보야말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또 하나는 사회의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얼마 전 지적장애 1급을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그 자녀가 자신의 반으로 와서 너무 힘들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교실을 자주 이탈하고 힘드니, 아예 자녀를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짜증스럽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에 대한 언어나 신체적 폭력, 따돌림 등 냉대와 차별이 심각한 현실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나 학급의 평균 성적을 깎아내린다며 장애학생 받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졸업 후 취업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입학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은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마음을 원할 것이다. 장애인의 날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장애인 복지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가운데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그곳에 와서 장애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자신들의 봉사하는 장면을 외부에 알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봉사를 왔으면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땀을 흘리는 봉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장애인들은 잠시나마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일자리로 인한 고통, 이동의 어려움, 교육이나 참정권 등 권리행사 측면의 차별대우 및 장애인을 대하는 국민의 차가운 냉대와 편견 속에서 오늘도 가슴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에만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하지 말고, 1년 365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서로가 하나 되어 어우러져 행복하게 웃는 밝은 미래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대량 학살

인류 최초의 대량 학살은 기원전 146년 고대 로마에 의해 저질러졌다. 당시 로마인들은 오랜 세월 적대관계에 있던 카르타고인들을 몰살하고, 그들의 살과 뼈 위에 강대한 로마제국을 건설했다. 카르타고는 무려 7일간에 걸쳐 로마군에게 짓밟혔으며 수만 명이 집과 거리에서 학살당했다. 당시 역사가인 폴리비우스는 "도로에는 피가 강물을 이뤘고, 돌계단은 피범벅이 되어 미끈거렸다"고 학살 현장을 묘사했다.

제노사이드(Genocide)라 불리는 대량 학살은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1521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고대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공격해 주민과 도시문명을 파괴한 일이나, 1915년께 터키인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집단 살육은 널리 알려진 사건들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600만여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1937년께 일본인이 중국인 수 천명을 도륙한 '난징 대량 살육사건' 그리고 1940년 소비에트 비밀경찰이 폴란드에서 관리들을 대거 살해한 '카틴 숲 대학살'의 참상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

1975년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그리고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진 대량 살육도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하고 있다. 최근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해 티크리트 지역에서 이라크군 포로로 보이는 1700여 명을 학살한 사실이 드러나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잔혹한 세계사'의 저자 '조지프 커민스'는 대량 학살에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가해자들이 '집단 학살은 더 나은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선전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한다는 점이고 마지막은 여성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취급됐다는 점이다.

우리 역시 일본 제국주의에 '학살당한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조지프 커민스는 "대량 학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에게 자행한 학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일본에겐 당연하겠지만, 우리에겐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